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에

공공정보는 더이상 단순한 공개대상이 아니다. 적절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콘텐츠다. 일반 국민을 위해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와는 별개로 공공정보를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돼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정보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개최한 세미나는 '공공정보 상용화'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델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글 / 임태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과 모델' 세미나가 지난달 15일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가 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공정보 상용화 모델과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정보 상용화의 국내외 사례와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모델과 전략을 주요 테마로 국내외 7명의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PSI 정책

공공정보의 상용화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EU)이다. EU는 eContent 프로젝트를 통해 PSI(Public Sector Information)의 상용화를 꾀해왔는데, 그 근거는 지난 99년의 녹서(Green Paper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와 2001년의 통지문(Communication: e-Europe 2002 : Creating an EU Framework for the Exploitation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그리고 2003년 제정된 지침(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에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해외사례로 발표된 PSINet 프로젝트 역시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해 시작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다. PSINet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로버트 데이비스(Robert Davies)는 PSINet의 역할과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INet은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국가, 단체, 공공정보 소비자 대표들 간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정보 관리 프레임워크와 표준,

상용화 규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사례로 소개된 EULIS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리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EULIS의 부책임자인 아그니스카 드라브냐(Agnieszka Drewniak)은 현재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등 유럽 8개 국가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 이날 세미나에서 EU PSINet 프로젝트 매니저인 로버트 데이비스는 공공정보 상용화의 문제점과 해결책, PSINet의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과 모델' 세미나가 지난달 15일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개최됐다.

국가별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고, 주요 고객은 고급 지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층이라고 밝혔다.

NGIS와 수익 모델의 개발

공공정보 상용화의 국내사례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서비스와 웹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특허정보가 소개됐다. 건설교통부의 조성균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NGIS)의 구성, 지리정보유통망 등을 소개하면서 결제 방식과 수수료 부담방식, 운영 및 관리기준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허정보를 가공해 서비스하고 있는 이형철 웹스 사장은 발표를 통해 "공공정보의 상용화 수익모델은 좋은 데이터를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정확한 시장분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근거 법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법률 모델이 제시됐다. 공공정보 상용화 근거법의 미래 모델을 제시한 이영대 변호사는 약 30개 조문에 이르는 법률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한국 공공정보 거래소', '공공정보 평가 절차', '공공정보 제공기관의 상용화 전담조직의 설치', '통상이용 허락', '공공정보 메타데이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도 제시됐다. 하나로드림 김철균 상무는 "공공정보는 기업의 투자전략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소스 콘텐츠로서 가치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 환경마련 활용 기대돼

끝으로 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됐다.

담당자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김화순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공공정보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흘러가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 부문간의 상호이해와 노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제도 기반의 마련과 발전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선진국의 주요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전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현행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법률 모델과 상용화 전략은 향후 이슈화를 통해 정책적 환경 마련에도 그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제공할 유용한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통 체계로 정착시키거나 이를 위한 컨설팅에는 소극적(공공기관)'이었으며, '공공정보의 필요성은 대체로 경험했으나 공공정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거나 유료로 공공정보를 구입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민간사업자)'는 답변이 많았다. 